

재정자금 지출방안

- 현금, 소비쿠폰, 전자소비바우처 혼용이 효과적

2009. 3. 12.

1. 보조금 지출의 방안과 기대효과
2. 현재 외국의 추진 사례
3. 지급 수단별 장·단점 평가
4. 대응방안

1. 보조금 지출의 방안과 기대효과

○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조세·재정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

-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비롯하여 실물 부문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대책들이 발표됨
 -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이 미국, 영국, 일본, 독일 등에서 공급되었고, 2008년 11월 이후에는 각국의 특성이 반영된 경기활성화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음
 -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가 자동차, 학자금, 신용카드 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(ABS)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1조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

< 각국의 유동성 지원 및 경기활성화 정책의 규모 >

	유동성 지원	경기활성화 정책		
		규모	GDP 비중(%)	시행기간
미 국	7,000억달러	7,872억달러	5.5	09년~
영 국	2,500억 파운드	200억 파운드	1.4	09~12년
일 본	33조엔	12조엔	2.0	08~10년
독 일	5,000억유로	800억유로	3.0	09~12년

자료: 한국은행, 해외경제포커스

- 실물 경기 활성화 정책¹⁾들 중 가계지원 정책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보조금 지급과 조세정책으로 구성됨
 - 가계지원 정책으로는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, 실업자에 대한 사회 보장급여 인상, 자녀양육비 인상, 아동수당 인상 및 상품권·현금 지급 등이 있음
- 현금, 상품권, 보조금 지급의 현금 지출 방안은 소비자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주요국들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음

1) 실물경기 활성화 정책은 가계 및 기업지원, 고용창출 정책,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으로 구분 될 수 있음.

○ 보조금 지출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종의 상품권 및 현금을 통한 보조금을 나눠줘 생계비를 보조해주고 내수도 부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

- 보조금 지원 정책은 소비 증대에 즉각적인 효과가 큰 저소득층에 집중된 정책 입안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, 기타 고용 및 기업지원 정책들과 연계할 경우 더 높고 지속적인 소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-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009년 경기활성화 법안의 소득세 감세를 중산층(200,000달러 이하)에 적용하였고, 영국, 독일, 프랑스 등도 저소득층,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원 등을 강화

2. 현재 외국의 추진 사례

○ 세계 각국은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, 상품권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

- 주요국들의 소비활성화 지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
- **보조금 지급 방식:** 최근 주요국 정부는 소비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금, 상품권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을 실시
 - **(보조금 지원)** 독일은 지난 1월부터 중고차를 친환경(배기가스 규정 충족 조건) 신차로 교체할 경우, 2,500유로(약 470만원)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2월 독일 국내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동월대비 22%증가
 - 중국도 ‘가전하향’²⁾과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소비 진작을 꾀하고 있으며, 1600cc 이하급 자동차나 오토바이에도 구매가격의 13%정도를 지원할 계획임
 - **(상품권 지원)** 대만 정부는 지난 1월 전국민에게 1인당 3,600대만달러(약 16만원)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백화점 매출이 10% 신장한 것으로 분석되며,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서민들에게 소비쿠폰을 발행

2) ‘가전하향’이란 농민들이 가전제품을 살 경우 정부가 구매가격의 13%를 지원한다는 제도

- **(현금 지원)** 일본은 국민들에게 1인당 기본적으로 1만 2,000엔(약 18만원), 18세 이하나 65세 이상은 2만엔(30만원)씩의 현금을 지원하여 소비로 유도하는 정책 실시를 통해 0.1%p의 국민총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
- 태국도 월급여가 1만 5,000바트를 넘지 않는 900만명의 빈곤층에 2,000바트(약 8만 6천원)씩의 현금을 지급
- 또한, 중국의 중앙정부도 설 연휴(춘제) 직전 7,570만명의 서민에게 1인당 100위안에서 180위안까지 90억위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

< 각 국의 주요 소비활성화 대책 >

	주요 대책
미국	- 75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무재조정 - 연봉 7만 5,000달러 이하 봉급생활자에게 400달러 세금감면
일본	- 1인당 1만 2,000엔 현금 지급 (18세이하 또는 65세이상은 2만엔)
중국	- 농민이 가전제품 살 때 구매가격의 13% 지원 - 지방정부별로 소비쿠폰 발행
독일	- 9년 이상 차 친환경 신차로 교체 때 2,500유로 보조
프랑스	- 10년 이상 차 친환경 신차로 교체 때 1,000유로 보조
이탈리아	- 저소득층 130만명을 대상으로 매월 생필품 구입용 카드 (40유로 상당) 지원
호주	- 870만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950 달러의 1회성 세금 보너스 지급 → 1인 소득 가정, 농부지원, 취학자녀 지원 보너스 외
대만	- 1인당 3,600대만달러 상품권 지급, 추가 지급 검토

자료: 각종 언론 보도.

3. 지급 수단별 장·단점 평가

○ (지급 방식 선택) 정부가 어떤 정책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

- 보조금 지급 수단은 현금, 상품권, 전자소비바우처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됨
 - **현금 지급**은 이용하기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,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아 활용도가 높으며,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이 목적인 경우 효과적인 방식임
 - 그러나,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저축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소비진작 효과를 제한함
 - **상품권 지급**은 소비 활성화의 측면에서 현금보다 기여도가³⁾ 높을 수 있는데, 유통성을 증대시켜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 기간과 분야 등을 한정해야 할 것임
 - 또한 상품권 지급 방식도 가계가 상품권 수령 액면가만큼의 기존 지출을 줄일 경우 소비 증가 효과는 달성될 수 없음
 - **전자소비바우처**는 현금과 상품권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사용처가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어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
 - 반면, 초기 발행 및 인프라구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고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림
- * 전자바우처 : 선불카드 형태의 바우처 카드로 특정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원금이 적립된 카드를 지급받아 신용카드처럼 결제하는 방식

3) 하지만 1999년 일본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만엔의 상품권을 국민들에게 나눠줬지만, 실제 소비에 사용된 상품권 비중은 32% 불과하고 이로 인한 실제소비효과는 발행액의 10%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. 국민 상당수는 상품권을 '상품권 할인' 방식으로 현금화 한 후 저축(발행 상품권의 60%에 해당)하는 바람에 소비 진작에 실패함.

< 지급 방식별 장단점 >

	장점	단점
현금	- 극빈·저소득층에 소득보전 효과 - 용도·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	- 소비가 아닌 저축 가능성 - 사후 모니터링 어려움
소비상품권	- 소비진작 효과 - 사용기한 및 용도를 정할 수 있음	- 상품권 발행 비용 부담 - '상품권 할인' 등 음성적 유통의 폐해 우려
전자소비바우처	- 소비진작 효과 - 실시간 사용 현황 모니터링 가능	- 인프라 확보에 비용 발생

- 소비 상품권과 전자소비바우처의 경우 시행 전 유통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임
 - 백화점과 할인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 어디에서든지 정부가 지급한 상품권 및 전자바우처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망을 정비해야 함
 - 아울러 상품권 지급시에는 현금화됨으로써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 이외의 사용 용도로 전환될 수 없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

4. 대응방안

- 정부는 경기 활성화 대책의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금, 소비 상품권 및 전자소비바우처의 세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급
 -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현금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소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 - 소비상품권과 전자소비바우처 혼용 지급
 - 근로능력을 가진 실직자 등에게는 소비상품권과 현금 혼용 지급
 - 단,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직불카드와 같은 '전자소비바우처'를 활용
 - 소비상품권의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래시장 유통할 인권을 사용